

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미나 자료

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 발전전략

2008. 3. 6.

김영수 [지역산업팀장]

KIET 산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
Economics & Trade

목 차

I. 광역경제권의 필요성

II.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

III. 광역경제권 발전 기본구상

IV .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방향

V. 세계적 경쟁거점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

VI. 추진체계 구축 방안

VII. 기대효과

I. 광역경제권의 필요성

산업연구

1. 왜 최근 광역경제권인가? [1]

광역권은 국토계획의 고전적 주제

- 광역권의 개념 : 개별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지역
- 광역권과 같은 기능지역(계획지역)의 설정은 행정구역의 고착성 때문에 불가피
 - 광역도시권 설정, 광역 SOC 설치, 광역행정기구, 광역권 계획 등의 문제

국토계획에서의 공간적 단위

제1차 국토계획 [1972~1981]	제2차 국토계획 [1982~1991]	제3차 국토계획 [1992~2001]	제4차 국토계획 [2000~2020]	제4차 국토계획 수정 [2004~2020]
4대권, 8중권, 17 소권	28개 지역경제권	9개 지역경제권	· 10개 광역권 · 6개 국토축	7+1 경제권역

1. 왜 최근 광역경제권인가? [2]

광역경제권의 경제 산업적 배경

- 세계화, 지역의 주요 경쟁단위 부상 → 경쟁력 강화, 규모의 경제 필요
- 지식기반경제(산업) 전환 → 지식의 창출-확산-활용 시스템 중요. 도시(지식창출)와 인접지역(지식활용)간 긴밀한 연계 필요
- 산업의 융합화 추세 → 도시의 서비스산업과 인접지역의 제조업간 유기적 연계 필요
-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 → 산업의 공간적 생태계와 지역의 자율성 중요

광역경제권의 핵심

중추도시와 인접지역(광역도)의
경제 산업 측면 협력·연계·통합



-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활성화
- 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

2. 정책과 이론의 최근 동향

정책 기조 : 신지역주의로의 전환

	전통적 지역주의	신지역주의
경제적 배경	- 포드주의, 규모의 경제 추구 -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초한 고성장시대	- 경제의 세계화 - 지식기반의 유연생산체제 - 경쟁력 있는 집적경제단위로서 지역의 부상
정책 목표	-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 - 지역간 형평성, 재분배 강조	-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형 발전 도모 - 세계적 경쟁거점 구축
주요 정책	-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, 조세 감면 - 산업의 지역간 재배치 - 부문별(sectoral) 정책	- 지역의 혁신환경, 기업간 연계 강조 - 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원 - 지역에 근거한(regional based) 통합적 정책
추진 체계	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체계	- 민간-공공의 협력적 거버넌스 - 지역의 자율성 증대

지역공간 단위 : Global City-Region의 대두(1)

배경과 개념

- Global city-region은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지역주의 발전 모델의 지역 개념
- 지역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추도시와 배후지역을 경제사회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형성

Global City-Region의 특성

Global City



Global City-Region

지역공간 단위 : Global City-Region의 대두(2)

Global City-region의 핵심 동력

- 광역지역(region state 또는 city region)이 기업경쟁력의 창출과 조직의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
 - 적정 규모: region state(오마에 겐이치) 인구 500만~2000만명, city-region 800만~1200만명 등
- Global City-region의 핵심적 동력: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와 효율적인 지역혁신체계의 존재 유무에 의존
 -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관기관(대학, 연구소, 각종 지원기관)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공간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집적
- Global City-region의 산업클러스터 이점
 - 세계도시지역 경제시스템(혁신체제)의 전반적 효율성을 보장
 - 생산자의 유연성이 증대되고, 창의성과 학습 및 혁신이 강화 → 생산성 향상

II.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

*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
Economics & Trade*

산업연구원

II.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[1]

지역정책의 기초 변화

- 형평성, 지역 안배, 지역간 발전 격차 완화 → 효율성, 경쟁력, 글로벌 경쟁거점 육성 강조
-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 → 수도권도 세계적 경쟁거점 육성 차원에서 접근
- 수도권 규제 중심에서 탈피 →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경제권 육성 지원

정책목표 변화 : 글로벌 경쟁거점 지역 육성

- 시도 단위 자립적 발전 지향 → 경쟁력 있는 세계적 성장거점 지향
- 행정구역 단위의 소지역간 경쟁에서 탈피 → 세계 경제 내에서 해외의 경쟁거점과 경쟁
- 산업, R&D, 인프라 등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갖도록 초광역 수준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

II.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[2]

Hub-Spoke형 중층적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향

- 13개 시·도의 기존 전략산업(52개)은 위상에 차이가 없는 단층적 구조
- 세계-국가-지역 단위의 허브클러스터 구분 및 Hub-Spoke 클러스터간 중층적 연계구조 형성
- 경제권역 단위의 핵심적 전략산업 Hub Cluster를 선정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육성

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방식의 변화

- 지역간, 정책간(산업-R&D-인력) 분절 또는 연계 미흡 지양
➔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유관 지역간, 정책간 통합·연계 강화
- 소지역 차원의 혁신인프라(특화센터 등) 구축 사업 중심
➔ 기존 혁신인프라간의 네트워크, 기능 분담, 연계 강조
- 제조업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중추도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계
- 광역지자체간의 협력과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

Ⅲ. 광역경제권 발전 기본구상

1. 광역경제권의 설정

광역경제권 설정 기준

- 노동시장 형성 (인구규모, 통근권), 중추도시와 성장거점의 존재, 지역적 동질성 (지역간 협력 가능성),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, 역사성(지역과 정책의 양측면)
- 정책추진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접한 광역행정구역 단위로 설정

5+2 광역경제권

- 수도권 (서울, 인천, 경기), 충청권 (대전, 충남, 충북), 호남권 (광주, 전남, 전북), 동남권 (부산, 울산, 경남), 대경권 (대구, 경북), 강원권, 제주권
 -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별도 고려
 - 강원은 지역의 희망시 대구·경북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결합 고려

2. 발전 목표

〈최종목표〉

5대 광역경제권을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

〈중간목표〉

비수도권 지역 광역경제권을 수도권 수준의
글로벌 경쟁거점지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
산업 및 혁신 기반 확충에 주력

〈정책과제〉

초광역 산업클러스터 및 혁신체제 구축

- 전략산업중심의 초광역 클러스터 형성
- 전략산업과 연계한 R&D 기반 강화
- 경제권역내 산·학·연 협력네트워크 구축

광역경제권 중심도시의 중추관리기능 강화

- 광역경제권 중추도시의 행정, 경제, 교육·연구, 서비스산업 등 거점기능 강화

국제 인프라 정비 및 확충

- 광역경제권별로 공항, 항만 등 글로벌 접근성 강화

민간-공공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및 제도 기반 구축

- 글로벌 허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 강화
- 인접 시·도간, 공공-민간간 파트너십 활성화

3. 추진전략

광역경제권의 핵심사업에 집중

- 광역경제권 기능지역 설정의 본래적 목적에 충실한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
- 기존 지역정책(지역산업 진흥, 지역혁신사업 등)과 연계

단계적 접근

- 광역경제권별 핵심역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세계적 경쟁거점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

민간-공공간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

-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산업클러스터와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,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
- 추진주체의 기능: 기획기능, 조정기능, 평가기능에 집중. 사업집행은 사업내용별로 유연한 형태의 사업단을 설립하여 시·도간 협력하에 추진
-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민간중심의 추진기구 지원 역할에 충실

IV. 광역경제권별 발전비전과 방향

1. 수도권

발전 비전

- 국제비즈니스와 물류, IT, BT가 융합된 세계적 경쟁거점으로서 동아시아의 선도적 경제권으로 도약

수도권 산업발전 전략

핵심산업

발전전략

국제금융 ·비즈니스

- 서울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연계·협력을 통해 국제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 아태본부 등 유치

국제물류

-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종합물류시스템 구축
- 인천·평택 경제자유구역의 연계 발전, 인천항·평택항의 클러스터 구축

반도체 등 IT

- 경기의 IT-LCD클러스터 연계 강화
-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

바이오(의약)

- 서울, 인천(송도), 경기도에 산재한 연구기관과 생산기능을 연계하여 경쟁력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

2. 충청권

발전 비전

-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광역권의 전략산업 연계를 통해 동북아의 실리콘벨리로 부상
 -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창·오송단지,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잇는 **국제적인 과학비즈니스 도시** 건설
 - **오창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** 추진 및 IT 및 바이오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육성

중부권 산업발전 전략

핵심산업

발전전략

바이오

- 대덕의 R&D기능과 오창, 오송의 생산기능 등을 연계하여 세계적인 바이오거점으로 육성
 - 대전 및 오창은 생명공학, 홍성, 예산, 청양, 논산은 농축산 바이오, 금산은 인삼 등에 특화

전자정보

- 천안·아산에 집적된 전자정보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천안-연기-세종-공주-부여를 연계한 디지털콘텐츠 문화산업 육성
-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3. 대구·경북권

발전 비전

- “전자정보기기, 지능형자동차부품 중심의 산업클러스터” 형성을 통한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거점 구축
 - 세계 일류상품과 미래지향적 제품 생산기능을 연구개발기능과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경제권역 형성

동북권 산업발전 전략

핵심산업

발전전략

전자정보기기

- 구미의 모바일, 디스플레이와 대구의 모바일S/W,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을 연계하여 발전

자동차부품

- 구미의 IT와 대구-경산-영천-경주-울산으로 연계되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집적지로 육성
 - 대구의 DGIST, 포항의 지능로봇센터, 나노기술집적센터, 방사광가속기 연구소 등 연구개발시설을 활용

동남권 산업발전 전략

핵심산업

발전전략

산업연구원

5. 서남권

발전 비전

- 첨단산업, 물류 및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통한 환황해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
 - 단기적으로는 경제권역내 3개 시·도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기반 확충 지속 추진
 - 중장기적으로 경제권역내 산업연관관계 강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부상

서남권 산업발전 전략

핵심산업

발전전략

자동차

- 광주와 군산의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광주·전북의 기계, 전남의 신소재를 광역 차원에서 연계

바이오(식품)

- 전남·북의 바이오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계
- 농업, 관광과 융복합화를 통해 세계적 식품·휴양관광 클러스터 지향

신재생에너지

-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, 신재생에너지 제조, 발전을 권역내에 연계 집적

V. 세계적 경쟁거점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

1.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 육성사업

지역산업진흥사업 프로그램 개편



글로벌 경쟁거점사업 추진방안

- 공모 방식 선정: 광역시·도간 협의체 또는 독립적 사업단이 글로벌 경쟁거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, 이를 심의하여 선정
- 지원대상 지역 및 산업은 축소하되 개별 사업규모는 대폭 확대
- 세계적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여 사업 발굴: 허브형 혁신지원센터, 전략기술개발 지원, 기업지원서비스 및 핵심 인력양성 사업 추진
- 준포괄 성과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추진의 자율성 제고 및 성과목표 관리

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[예시]

선정 기준

- 전략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
- 수출액 및 비중
- 세계적 핵심기업 존재 유무
- 관련 기업 및 연구인력의 집적 정도
-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의지 등





산업연구원

2. 광역경제권의 자율적 혁신체제 구축

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적정 공간단위로서의 광역경제권

- 기존 시·도단위의 자기완결적 혁신체제 구축으로부터 탈피
- 중추도시를 포괄한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 필요

광역경제권별 혁신체제 구축 주요사업

- 충청권: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통해 혁신체제 구축의 구심점 형성. 기초연구개발 분야 강화, 창의적 기술의 창출 거점 역할
- 동남권, 대경권, 호남권: 각 권역의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R&D특구 확대 지정, 전략산업과 연계된 응용기술 및 사업화기술 분야 집중
-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광역경제권별 예산 배분을 통한 경쟁과 효율성 제고

3. 연계·협력사업 프로그램의 강화

지자체간 연계·협력 유도

- 경제권역내 인접 시·도간 협력사업 또는 공동운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사업 예산의 일정비율(예: 20%)을 협력사업에 배정
- 지자체간 사전 협약을 전제로 광역경제권간 경쟁방식을 통해 지원
- 지자체간 협력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(최대 80%)

기존 사업·기관간 기능의 특화 및 연계강화

- 지역내 다양한 혁신지원기관(RIC, 특화센터, TP, 창업보육센터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)간의 기능별 특화, 연계 및 역할 분담, 통폐합 등 추진
➡ 전문화, 규모의 경제 추구, 성과 제고
- 혁신지원기관간 경쟁을 통한 Hub 지원기관 선정 및 집중 육성
- 부처간, 부처내 유사사업들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 조정

4. 광역경제권 중추도시의 기능 및 역할 강화

지식기반경제에서의 산업입지 특징

- 고급인력의 밀접한 상호작용, 정보화 기반, 대도시의 복합성, 산업의 다양성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좋은 환경 제공 ⇒ 대도시로 산업의 재집중화가 전세계적 경향
- 중추도시의 경쟁력이 광역경제권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

주요 정책 과제

- 중추도시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(S/W, 전문비즈니스서비스, 금융, 컨벤션, 문화컨텐츠 등) 집중 육성
- 거점 명문대학 육성, 자녀교육 여건 개선, 문화·위락기능 확충 등 고급인력의 정주여건 개선
- 도시(혁신도시 포함) 및 배후지역간 기능별 특화에 기반한 네트워크 도시화
- 초광역단위 공항, 항만 등의 확충을 통한 국제적 개방성 확대

VI. 추진체계 구축 방안

1. 기본 방향

기본 방향

- 민간주도의 조사·기획·집행, 공공부문의 지원·조정 등으로 역할 분담
→ 지역·민간중심의 추진체계, 민간-공공의 파트너십 구축
- 권역내 총체적 완결성 지향은 지양 → 광역경제권 내부의 혁신자원 발굴·활용을 전제로 부족한 자원은 국내외 연계를 통해 개방적·글로벌 확충
- 광역단위 추진사업의 특성(공공성·수익성 정도, 공간적 파급효과 등)을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방식(공공, 민간, 제3섹터 등) 다양화
- 광역경제권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주체(기업, 대학, 혁신기관 등)의 사회적 합의하에 자발적 참여유도 및 점진적,단계적 추진
- 부처별·지자체별 분리 추진되는 정책들을 패키지(package) 정책으로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

2. 추진 조직

중앙 추진조직

- 대통령 직속 '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' 설치
 - 정책의 핵심은 **전략산업의 글로벌 거점 클러스터 육성**에 있음을 고려
 - 주요기능 : 부처간 정책패키지 유도, 광역단위 사업간 조정·연계, 글로벌 네트워크지원, 사업평가를 통한 정책지원의 차등화

지역 추진조직

- 지역 자율형 '지역본부' 체제 : 행재정권의 부여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
- 단계적 접근
 - 단기 : 전문성, 창의, 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**민간중심의 프로젝트 사업단 위주의 유연한 조직체계** 운영(전략산업기획단, TP의 조직·인력 활용)
 - 중기 : 제3섹터형 독립적 지역발전기구(RDA)로 확대·운영
 - 장기 :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한 조직체계 구성
- 프로젝트 사업단 :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조직의 수·유형·추진방식 등 다양화
 - 주요기능 : 광역권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, 공동연계사업의 발굴 및 사업우선순위 검토, 사업협력 및 평가체계 구축, 글로벌 네트워크 촉진 등 담당

3. 관련 법·제도 정비

관련 법·제도 정비

- 관련 법령 정비: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및 기획단의 구성·기능·재정 등에 관한 법제도 마련(관련법령 개정 및 특별법 제정)
- 재정운영체계 구축: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출에 대한 운영시스템 구축(예: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)
- 평가체계 구축: 중앙단위·광역단위의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·사후적 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 유도 및 도덕적 해이 방지
- 시범 선도사업의 추진: 광역경제권별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상호학습 및 활성화 방안 모색

VII. 기대 효과

1. 광역경제권 정책의 효과

광역경제권 접근에 따른 기대효과

- 지역혁신체계(RIS) 구축을 통한 자율적 경제권 형성 ⇒ 지식의 창출-확산-활용 체계 복원,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간의 연계 강화
- 산업의 공간적 생태계(클러스터)에 맞는 행재정적 산업지원체계 구축 ⇒ 중복투자 최소화,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등
-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다변화된 지속가능한 성장엔진 확보
- 복수의 국가적 성장거점(growth pole) 확보 ⇒ 광역경제권 정책은 국가성장 전략(강소국 모형 vs 강중국 모형)

감사합니다

산업안전보건